

인권 보장과 현법 - 최근 3개년 3문제 정답률 30%이하



자세한 통합사회 ▶

2025.09.15 | 3문제 | 아름다운 코끼리 | 이름 _____

수능과 내신을 한권에 담다

1.

2024학년도 6월 모평 6번 (난이도 상, 정답률 28%)

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,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다.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.

<보기>

- ㄱ.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을 양립할 수 있다.
- ㄴ.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.
- ㄷ.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.

① ㄴ ② ㄷ ③ ㄱ, ㄴ ④ ㄱ, ㄷ ⑤ ㄱ, ㄴ, ㄷ

3.

2025학년도 수능 18번 (난이도 상, 정답률 24%)

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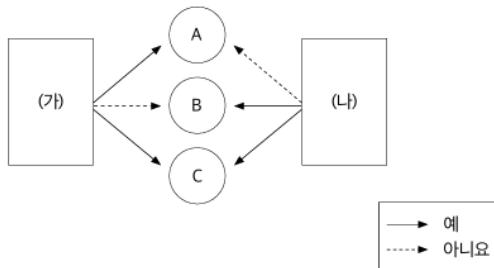
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.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.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.

- ①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.
- ②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③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.
- ④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.
- 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2.

2023년 3월 학평 17번 (난이도 상, 정답률 27%)

다음 자료는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A~C를 구분한 것이다.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(단, A~C는 모두 중학교를 졸업했고, 연령은 각각 17세, 18세, 20세 중 하나임) [3점]



<보기>

- ㄱ. (ㄱ)에 '사용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가?'가 들어갈 수 있다.
- ㄴ. (ㄱ)에 '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한가?'가 들어갈 수 없다.
- ㄷ. (나)에 '연장 근로 없이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?'가 들어가면 A는 17세이다.
- ㄹ. (ㄱ)에 '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?'가 들어가고 (나)에 '연장 근로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?'가 들어가면, C는 18세이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